

“전문가가 돼라”

송 지사, 간부회의서 과장을 중심으로 한 도정운영 필요성 강조



전문가가 되어야 현안 해결이 용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현재 모든 실국의 업무와 현안에 대한 결재와 방편 결정이 국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장들이 일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행정사항에 대한 결재는 과장이 직접 보고하고 국 전체 소관이 아닌 과단위에 국한된 회의는 과장이 직접 주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각 분야별,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해당 분야의

운영을 강조한 것은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여 업무의 속도를 높이고 2019년 국가예산 확보, 각종 현안해결 등에 과장급들이 앞장 서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국장들과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도정의 핵심 중간 간부인 과장급들이 민선 6기와 연속됨에 따라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정의 분위기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쇄신하여 각 분야별 성과를 높이는 데 뜻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안보지원사 창설,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 간판만 바뀐 개혁”

시민단체 “개혁대상 기무사에 조직개편·인적청산 맡겨놓은 셈”

계엄령 문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개혁 일환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간판만 바뀐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 통인동 참여연대 본관 이룸드림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만 추진 중단 촉구

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 전반을 현직 요원들이 주도해나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27년 막을 내리고 다음달 1일 창설되는 기무부의 새로운 명칭인 ‘안보지원사’는 기존 조직과 달리 정치적 중립의

무와 민간인 사찰 금지가 직무수행 기본원칙으로 명시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남영신 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창설준비단을 발표한 바 있다.

창설지원단은 ‘부대창설지원 태스크포스(TF)’ 및 ‘인원선발위원회’로 구성된다. TF 산하에 기획총괄, 임무조직, 예산군수, 인사행정, 법무장비를 담당하는 5개 부서가 편성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제는 창설준비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남사령관이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이라며 “(지원단은)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됐다”고 했다.

임 소장은 “이들이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며 준비단 소속 기무사 대령을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고, 준비단 역시 이들의 말을 신뢰하고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폐의 온상이나 개혁대상인 기무사에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모두 맡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복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제보에 따르면, 준비단의 산하 기구인 창설지원단은 70여명의 중령 또는 대령 등 영관급 장교로 구성된다. 이들 대다수가 계엄령 모의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조원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남북 노동자 맞손 남북노동자단체 대표 남측 김주영(왼쪽부터) 한국노총 위원장, 북측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남측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단체 대표자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전북선관위, 초·중등 교원 민주시민교육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북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수능력 향상과 선거·정치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 연수는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나라 정치·선거제도

▲학교선거 관리·운영 ▲토의·토론 수업방법 ▲민주시민교육방법론 ▲4차혁명시대의 미래교육 등 총 13개 과목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기법 등 실질적으로 직무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선생님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도, 폭염피해 최소화 11억6000만원 긴급 추가 지원

전북도는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8월초 예비비 2억89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엔 11억 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축종별 중·소규모 농가로 선풍기, 동력연개 분무기, 지붕스프링클러 등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축사용 온도저감 시설·장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60%를 보조할 계획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업기간은 9월 말까지이다.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시행일(8월 3일) 이후 구입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농가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진성 기자

도, 균형발전사업 3건 선정

산학협력활성화 지원 창의산업거점기관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2018년도 균형발전사업(지역지원계정) 평가에서 전북도가 추진 중인 총 3건의 사업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산학협력활성화지원사업(과기부),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중기부)이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확보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전국적으로 선정된 10건의 사업 중 전북도가 3건이나 선정됐 그 의미가 크다.

평가대상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더위가 끝날 때 까지!... 장수, 폭염·가뭄 총력대응

장수군이 폭염이 장기화 되고, 가뭄 또한 우려되는 상황에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현재 무더위쉼터 28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이동이 많은 곳에 그늘막 8개소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14개소를 설치해 군민들의 폭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1,900만원을 활용해 장수읍·장계면 시가지 및 읍·면 마을길 살수를 실시했고, 장수·장계 터미널에 이동식 에어컨 2대를 임대해 적극적인 폭염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수 누리파크에서 폭염대응 물놀이장을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해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해 연이은 무더위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9일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8명, 군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수행인력 7명이 풀수건 및 롤토시 각 1,100개를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방문관리와 상시 안부전화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 수산 등 재산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작물 보호 관리를 폭염·가뭄피해 우려지역을 예찰하고, 재해보험을 홍보하며, 문자발송 및 마을방송을 실시해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 이장회의 등에서 농작물 관리요령 등 영농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폭염 및 가뭄 종료 시까지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군수 연일 현장을 찾아 군민들의 폭염 및 가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